

## 주간동향 [2006. 8.31~9.6]

강민정

 본원 전문연구원  
 02-3156-7137  
 kwdi\_trends@kwdi.re.kr

- ❖ 국무회의 개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확정
-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절차 마련
- ❖ '여성정책 네트워크' 본격적 활동 돌입
- ❖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
- ❖ 한국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 ❖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 위한 국제회의 개최

### ❖ 국무회의 개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9월 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2010년 중 적절한 시기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를 적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조건을 영세 사업체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학업이나 가사 등 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이나 고령자 등을 위해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육아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부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8년께 시행된다.

특히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보험을 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5년간 최대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10월부터 시범실시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장기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비를 대부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절차 마련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인, 학계전문가, 법률가 등의 자문과 토의를 거쳐 마련한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기업에게 주어지는 정부조달 계약 등의 혜택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무늬만 여성기업’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여성기업단체, 장애인기업 등의 의견에 따라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달계약을 위해 조달청에 등록한 여성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작년 1년 동안 등록한 3,186개 기업의 87.1%에 달하는 2,777개에 이르는 등 여성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여성기업확인 방법 및 절차를 보면 ①남성인 대표자의 사망·퇴직, 배우자 이외의 자로부터의 기업인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한 기업과 ②여성인 대표자가 확인일 이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정신장애자여서 사실상 경영을 한다고 보기 곤란한 기업 등은 여성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 ①이해관계자는 확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기관은 이의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②확인기관의 심의요청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부조달 등 여성기업 지원시책이 실질적인 여성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 ‘여성정책 네트워크’ 본격적 활동 돌입

전국 13개 여성정책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여성정책 네트워크’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관을 새로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해 6월 중앙과 지역 간 여성정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2개 기관이 모여 발족한 여성정책네트워크는 지난 5월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가 새로 가입하면서 참여 기관이 지금의 13개 기관으로 늘었다.

지난 1년간 총 5차례의 모임을 갖고 ‘지역여성 통계 생산현황’,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여성정책 혁신과제’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온 이들 기관은 오는 9월 말 6차 모임을 열어 정관을 최종 의결하고, ‘지역 여성인적자원 개발 실태조사’, ‘전국 여성통계지표 개발’ 등 공동 연구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우 여성정책네트워크 회장은 “중앙과 지역이 서로 흩어져 각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내용이 중복되거나 통계 기준이 달라 전국 합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은 살리되 큰 틀에서 여성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모여지면서 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됐고,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름 삼아 적극적으로 공동 연구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공동연구사업을 개발하고, 중앙과 지역 연구기관들이 정보 교류와 상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전하고, “다만 기관별로 예산이나 인력 등 조직 규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또한 예산 삭감 위기에 놓인 일부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존폐 위기에 몰리는 기관들을 위한 네트워크 차원의 공동 대응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

한국 남성-외국 여성 부부의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빈곤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11.3%에 그치는 등 빈곤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 9월 6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국회에서 개최한 '2006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11주년 기념행사'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 빈곤 실태를 밝혔다. 주제발표는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가정 사회복지·보건의료 욕구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올렸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57.7%에 달했다.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가구도 15.5%나 됐다. 이같은 극빈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11.3%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여성 결혼 이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2년 정도의 기간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가구의 23.6%는 건강보험에도 들지 않는 등 의료체계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특히 2005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2천444건으로 전년의 1천611건에 비해 5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혼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58.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베트남(11.8%), 일본(6.9%) 등의 순이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5만9천942명으로 국제결혼의 72%를 차지했는데 2005년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의 35.9%(2천885건)가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었다. 농촌 총각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외국인 아내를 맞은 셈이다. 이들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1천535명), 중국(984명), 필리핀(198명) 등의 순이었다.

## ❖ 한국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6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표한 2006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지난해 1.22명보다 0.03명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UNFPA가 집계한 합계출산율은 2001~2005년 합계출산율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의 추이를 예측해 올해 출산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통계청(2005년 1.08명)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출산율 2.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선진국 평균 1.58보다도 밑돌았다. 조사대상국 155개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으로 0.94명이었고, 우크라이나 1.13명, 슬로바키아 1.17명에 이어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홍콩, 우크라이나,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여섯 번째로 낮은 기록을 나타냈지만 1년 만에 다시 두 단계 악화된 것이다. 북한은 합계 출산율이 1.95명으로 추정돼 5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의 평균 수명은 남성의 경우 63.9세, 여성 68.4세로 지난해보다 각각 0.2세씩 길어졌다. 최고 장수국은 남성 평균수명 79.1세인 홍콩과 여성 평균수명 86.1세인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74.2세로 30위, 여성은 81.5세로 18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1.1세, 66.9세로 100위, 98위를 기록했다.

세계 총 인구는 65억40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그 중 중국인이 13억236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도(11억1950만 명), 미국(3억100만 명)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4,800만 명으로 세계 25위, 북한은 2,260만 명으로 48위를 각각 기록했다.

## ❖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 위한 국제회의 개최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와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제적인 인신매매 방지운동을 추구하고 있는 UN 인신매매특별보고관(시그마 후다)이 '인신매매의 수요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또 돌첸 라이드홀트 반여성인신매매연맹 협동사무처장, 멜리사 펠리 성매매조사 및 교육연구소(Prostitution Research & Education) 소장이 각각 패널로 참석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내 패널로는 이영자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사회·문화·경제적 토양과 성매매의 폭력·착취구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국제회의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성매매방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